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7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 ‘ 명예훼손’ 송치

신정은 SBS NEWS 기자

체육시민연대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2.02.28(월) 20:00

비대면 ZOOM

2022 베이징올림픽

17일간 열전 끝낸 베이징올림픽 폐막... “4년 뒤 다시 만나요”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계획 철회

이준희 한겨레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에 외면받는 스포츠윤리센터, 인력도 조사권도 부족

박지연 파이낸셜뉴스 기자

스포츠복지도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스포츠 복지도시’ 만든다

김이현 국민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2022년 정기총회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소통과 만남에 장애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변화를 위한 체육시민연대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28일(월) 저녁 8시-9시

장소 : 비대면 ZOOM

(<https://cau.zoom.us/j/85731350610>)

- 사업 및 회계 보고
- 감사보고
- 2022년 사업 계획
- 임원 선출 및 집행위 인준 등

2022년 2월

체육시민연대

[단독] '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 '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없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며 "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조 전 코치 누나의 자택 IP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은 수사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 매체가 공개한 심 씨의 문자엔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전 고의 충돌 의혹, 동료 험담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의 유출자가 심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코치로 알려지며 의도적 보복이자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체육시민연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도 "조 전 코치가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적 정보를 적나라하게 언론 매체에 제공함으로써 가해 사실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했다"며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 문자 내용을 토대로 심 씨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심 씨의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씨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올림픽] 17일간 열전 끝낸 베이징올림픽 폐막... “4년 뒤 다시 만나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뒤로 하고 20일 폐회식을 통해 막을 내린다. 4일 개회식 이전에 2일부터 일부 종목 경기가 열렸던 것까지 더하면 19일간의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였다.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등 더운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고, 출전 선수의 여자 선수 비율은 2천892명 중 1천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회 개막 전과 초반에는 경기 외적인 논란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까지 창궐하는 악조건이었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개회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출연해 국내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감이 일어났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피해를 본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였다.

'베이징 올림픽'을 빗대 '눈뜨고 코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평가가 국내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단은 초반 오심 등 악재에도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14위)로 대회 전 목표인 '금메달 1~2개로 종합 15위 내 진입'을 달성했다. 황대헌과 최민정(성남시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하나씩 따내는 등 빙상 종목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이끌었다.

'코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악평도 나왔지만 대회 기간에는 '코끝을 찡하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딴 뒤 서럽게 울어 2018년 같은 종목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진 이후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한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또 김보름(강원도청)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역시 2018년 평창 대회 팀 추월에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의 부담을 이겨낸 역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폐회식은 20일 밤 9시(한국시간) 이번 대회 개회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인 폐회식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폐회식과 이번 대회 개회식 총연출을 맡은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또 지휘봉을 잡았다. 장이머우 감독은 이날 폐회식을 "마지막에 성화를 끝 때 2008년 하계올림픽의 한순간이 물리적으로 재현돼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초월'의 느낌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회식에서 무대 전체를 HD LED 스크린으로 꾸며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장이머우 감독은 폐회식 때도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묘하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은 4년 뒤인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이탈리아는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에 이어 세 번째로 겨울올림픽을 개최한다.

대한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계획 철회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실격 판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계획을 철회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일 중국 베이징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반칙 판정을 받아 실격했다. 한국 선수가 실격한 자리는 중국 선수가 대신 채웠고, 중국 런쯔웨이(21)가 결승에서도 판정 덕분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편파 판정 의혹이 나왔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는 경기 다음 날인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정에 항의하고, 이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은 제소 중단 이유에 대해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여론 등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 경기가 결승이 아닌 준결승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단,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한국 선수단은 지난 긴급 기자회견 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도, 승소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판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심판진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인에 외면받는 스포츠윤리센터, 인력도 조사권도 부족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기자

2022.02.15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2주년을 맞았지만 조사 공간, 인력, 조사권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예산 증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 강화를 통한 선수 보호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리교육 대상 40만명에 담당자 1명

15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용한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13.0%에 그쳤다.

문체부는 조재범 코치 사건 등 체육계 비리 등이 잇따르자 지난 2020년 8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돼 왔던 신고 채널을 일원화 한 '스포츠윤리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율은 대한체육회(25.9%), 소속 기관(16.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내 조사 공간, 필수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 내 조합원들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상담공간, 예산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로 만들어진 스포츠윤리센터에 원래의 설립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 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윤리센터 내 조사관 19명이 사용하는 조사실은 1곳에 그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해 조사관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 피해자와 따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윤리교육 수강 대상자는 40만명에 이르는 반면 센터 내 담당 실무자는 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조사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조사관들이 전자 서명 도구 등 필요 물품을 구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체육계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신분이 드러나 선수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윤리센터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인력, 예산, 공간 등 모든 것이 부족해 답답하다"고 했다.

■조사권 강화 및 체육계 인식 개선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예산이 8억7300만원 증액 편성됐다"며 "윤리센터 내 인력·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과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에 부여된 조사권 강화를 통해 체육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갖고 있는 조사권에는 강제성이 없다"며 "가해자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을 도입해 센터가 갖는 조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예산 확충을 통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도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현재는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응할 때까지 설득하거나, 제 3자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사이 피해자를 색출해 훈련에서 배척하거나 역고소를 하는 등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조사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선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윤리센터 설립만으로 스포츠 비리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체육계에선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망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러한 자체적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스포츠 복지도시' 만든다

서울시민의 스포츠 활동 진흥과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촉장 수여와 올해 서울시가 수립한 체육분야 주요 업무계획 등 안건 논의 등이 이뤄졌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체육단체·학계·전문가 등 총 13인(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이 참여하며, 서울시장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체육복지 및 인권 등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체육분야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서울시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산업 예비 취업·창업자 대상 '잡페어' 17~19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6088100007?input=1195m>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전북 건립 '확정적'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07&clD=10808&pID=10800

김천시, 제2스포츠타운 내년 3월 착공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680>

유승민 IOC 선수위원 "스포츠 외교력 키우려면 새 선수위원 미리 준비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1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미 북한에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분산 개최 제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0_0001765692&clD=10511&pID=10500

"내 상납금만 2000만원"…감독 비리 폭로 목살한 부산체육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710>

'훈련비 걷어 유흥' 부산시체육회 배구팀 전 감독 검찰 송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21521272238128>

천안시체육회 직원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피해 산재 인정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022400063?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서울 SPOEX 개최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2151058567847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